

"산단 환경관리권 여수시로 국세 5% 지방세로 이양을"



지난 11월 4일부터 여수산단의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 여수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여수산단 환경관리권을 여수시로 이전하고 산단 국세 5%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을 촉구하는 항의시한을 정부에 발송, 귀추가 주목된다.

11월 12일 여수시 31개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한 '여수산단 정부대책 촉구'를 위한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에 따르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공장 대형 폭발·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여수국가산단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요구서한을 발송했다.

특히 범시민위는 지난 10월 20일 정부의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정부에서 여수산단의 환경과 안전, 지역기여도 제고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지 않아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민협의회 한창진 상임대표는 "정부는 여수산단에서 매년 5조원이라는 엄청난 국세를 걷으면서 대형 위험물 화물차의 물동량이 많은 도로보수 및 유지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게 떠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정부 스스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수산단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시민위는 여수산단 문제해결을 외면하는 중앙정부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을 석창사거리에서 계속할 계획이며, ▲여수산단 국세의 5% 지방세 이양 ▲국도 17호선 대체도로 건설 ▲건강역학조사 실시 ▲환경관리권 여수로 이양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문제 해결, 사고다발 산단인 여수산단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노무현 대통령 및 고건 총리 면담을 제안했다.[무등일보]

위도 현금보상설 사기극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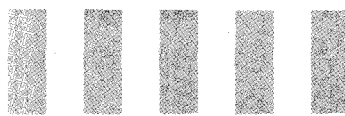
부안대책위 1000여명, 위도에서 집회... 핵폐기장 반대 호소



핵폐기물 처분장을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민들이 지난 11월 13일 핵폐기장 예정지인 부안군 위도면에서 핵반

대 선전전을 벌였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 소속 주민 1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격포항을 출발해 45분 뒤 위도 파장금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현지 주민 1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어 "3억~5억원씩 준다는 현금보상설과 관광사업을 담당할 위도주식회사(가칭) 건립 등은 터무니없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위도지킴이 서대석 공동대표도 "이형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최근 위도를 방문해 현금 보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며 ▲핵폐기장 백지화 ▲산업자원부 ▲장관 퇴진과 공식 사과 불안사태 진상조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5개조로 나눠 위도 주민에게 '핵폐기장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홍보물을 제공했으며, 위도에서 가장 높은 망월봉(해발 254m)과 망금봉에 대형 핵반대 깃발을 꽂았다.

또한 위도지킴이 재경지부 송종갑(39)씨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위도면사무소 앞에 천막을 치고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단식농성을 나흘째 벌였다. 송씨는 "위도 핵폐기장 선정과정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핵폐기장 철회 투쟁으로 이를 해결해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주) 부안사무소는 부안군에 연고를 둔 현지주민의 자녀 30명(남자 27명, 여자 3명)을 최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이들은 주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한겨레]

공항소각장 악취무관 주장 논란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의 원인지로 지목 받아온 공항 소각장에 대해 "악취와 소각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통추위)는 최근 공항공사에서 발송한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통추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공항 소각장은 관할 관청인 중구청으로부터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과 관련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소각장 운영사항은 공항신도시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악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항공사는 "낮에는 소각하지 않다가 새벽에만 금지된 물질을 몰래 소각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항소각장은 24시간 가동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주

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항공사는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감시 요원 위촉과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 "폐기물처리 관련법에 따라 의무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며, 지난 5월부터 테니스 코트를 개방해 신도시 주민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공항공사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은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와 주민이 공동으로 조사기관을 선정, 신도시 공기와 소각 물질을 비교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사교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통추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항공사가 밝힌 답변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 정도의 답변이라면 책상에 앉아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성의를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통추위는 공항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와 관련, 지난 9월 29일 공항공사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소각장 입지선정시 타당성 조사결과와 ▶소각 대상 및 범위와 종류 ▶주민감시 요원 위촉 의향 여부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 운용 여부 등을 요구했다.[충부일보]

양주 불법 폐기물업체에 쌓인 각종 폐기물





【미디어로 본 환경】

지난 11월 10일 양주시 은현면 무허가 폐기물업체인 S 산업 공장내 480여평의 공터에 폐섬유와 폐의류·폐합성수지 등이 적치되어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찰서 직원이 가려져 있는 천막을 펼치며 각종 폐기물들을 확인하고 있다.[경인일보]

수돗물 흠닥터 서비스 시행

"수돗물도 애프터 서비스 시대."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각 가정을 방문해 주택내 배관과 물탱크의 오염원을 점검해주는 '수돗물 흠닥터 서비스'를 최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11월 10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고도정수처리로 수돗물을 생산해도 주택내 노후관이나 물탱크 등의 오염으로 실제로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질이 나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녹스 무죄판 동맹휴업" 주유소협회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한국주유소협회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세녹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동맹휴업에 들어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이와 관련 '세녹스'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지법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가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경우, 업계 전체가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유소협회는 "세녹스는 대체에너지도 아니며 누구나 쉽게 제조 가능한 조악한 제품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유소협회가 회원사 동맹휴업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은 최근 담당 재판부가 '세녹스'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녹스'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가짜 휘발유는 단속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영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도 모호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연합]

화성시 환경복지국장 긴급 체포

공단을 짓는다며 8천여평의 산림을 무단 훼손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 서영수검사는 지난 10월 30일 업자 박모(44)씨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화성시청 환경복지국장 김모(56)국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11월 7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국장의 시청내 사무실에서 수첩과 서류 등을 압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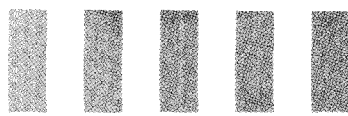
검찰에 따르면 K국장은 지난 2001년 박씨가 화성시 팔탄면 덕우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무사히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3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K씨에 돈을 줬다는 박씨는 지난 1월 4일 화성시 향남면 중거리 일대에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며 산림 2만7천932㎡을 무단훼손,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10월 추가로 2만2천254㎡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인천일보]

포름알데히드 노출 백혈병·폐암 위험

방부제, 소독살균제, 합판, 사진필름 제조, 생화학실험 등에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과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생물통계학자 마이클 하우프



트만 박사는 국립암연구소 저널 최신희(11월5일자)에 이와 같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의학뉴스 전문통신 헬스데이 뉴스가 지난 11월 6일 보도했다.

하우프트만 박사는 1966년 이전에 10개 산업시설에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기 시작한 근로자 2만5천619명을 대상으로 1994년까지 실시한 추적조사 결과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노출정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백혈병 발병 위험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69명으로 전체에 비해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포름알데히드가 백혈병과 연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우프트만 박사는 지적했다.

하우프트만 박사는 이 결과는 산업시설과 환경에서 포름알데히드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했다. [매일환경신문]

농약병 공병보증금제를

농촌 환경오염은 물론 관리소홀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빈 농약병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는 술이나 음료수 병처럼 공병보증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빈 농약병은 논·밭등 농경지 인근에 모아두거나 마을 공동집하장에 처리하면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 차량들이 수시로 수거해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농업인들은 농약을 사용하고 난 후 빈 농약병을 논두렁이나 하천가 등에 무단투기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약을 많이 취급하는 농촌지역에서 빈 농약병이나 농약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적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 빈 농약병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잔류 농약이 빗물 등을 타고 흘러나와 수질 오염과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게다가 농촌지역의 일손이 점차 노령화와 부녀화 되면서

탁아 시설이 없는 주부들이 어린 아이들을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영농현장까지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아무렇게나 버려진 빈 농약병으로 인해 아까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빈 농약병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병보증금 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병보증금제는 190ml 미만의 빈병은 1개당 20원, 190~400ml 미만은 40원, 400~1000ml 미만은 50원, 1000ml 이상은 100~300원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빈 농약병은 유리병은 kg당 150원, 플라스틱 용기는 kg당 8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술이나 음료수 병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농촌지역에서 환경오염 유발과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빈 농약병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농약병에도 공병보증금제도를 도입하면 수거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환경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일보]

인천 초·중·고 환경교육 부실

바다와 인접, 어느 지역 보다 환경교육의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인천지역의 상당수 학교가 환경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6일 인천시교육위원회의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을 묻는 안복치 교육위원의 질의에 초등학교 8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5개교만이 환경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90개교 중 재량활동을 통해 환경영역을 선택한 학교는 45%인 85개교에 머물렀고 학생은 6만 800여명으로 전체 24만8천명의 25%에 불과했다.

중학교는 상황이 더욱 나빠 환경영역을 택한 학교가 인성여중, 북인천중, 백석중, 심도중 등 겨우 4개 뿐이었으며

【미디어로 본 환경】

공부하는 학생수는 1천200여명으로 조사됐다. 학교수로는 전체 103개의 4%, 학생수로는 10만9천여명의 1% 수준.

고등학교는 부평고, 인천기공, 계산고, 운산기공, 검단고, 인하사대부고, 인명여고 등 25개 학교가 환경과목을 선택했고 학생수는 7천1백40여명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의 환경담당 교사는 겨우 4명, 고등학교는 5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초·중·고가 380개인 것을 감안하면 환경교육 선택 학교가 30%인 113개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교육이 부실함에 따라 나그네형 교육감은 더 많은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선택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부터 학교 주변 환경보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체험환경 우수사례 공모대회'를 개최, 우수학교와 모범학생을 표창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인천일보]

美軍 물부담금 12억 떼었다

미군측 "한국정부서 관련공문 안보내"

정부가 주한미군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행정처리 미숙으로 부담금 12억여원을 고스란히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5일 "정부는 당초 주한미군과 협상을 벌여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법이 처음 발효된 1999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치 부담금을 소급해 주한미군으로부터 받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관련 공문을 만들고 발송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3년치 부담금 12억여원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측은 3년치 부담금을 소급해 내라는 우리 정부의 정식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문서발송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아 결국 2002년 8월까지 3년치 부담금은 받지 못한 채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분까지 1년치 부담금 4억3000여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미숙으로 주한미군은 원래 내기로 했던 총 부담금 17억여원 가운데 4억여원을 제외한 13억여원을 가만히 앉아서 번 셈이다. 정부는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문서발송 사실이 증명될 경우 2002년 9월 이전 치 부담금을 소급해 받아낸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측이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못 내겠다고 버틴데다 협상에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 고심 끝에 2002년 9월부터 부담금을 소급해 받는 선에서 타협했다"며 "주한미군이 문서를 받았다는 추가적인 자료만 확보되면 이전 사용분의 부담금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환경전문가는 "주한미군이 당연히 내야 할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유감이지만, 이에 대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이 일을 처리한 당국의 행정이 한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음식물쓰레기로 버섯 키운다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버섯을 키우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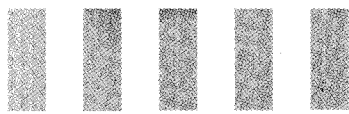
대전동구청이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남은 음식물을 활용해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흙누룩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을 도입, 운영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대전동구에 따르면 70%이상을 직매립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자원화 사업을 도입, 추진한다.

이 기술은 흙과 누룩을 배합해 담은 용기(가로40cm, 세로60cm, 높이35cm)에 음식물을 넣어 7일정도 발효를 시킨다.

이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양질의 퇴비와 사료로 변해 버섯을 기르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동구는 내년상반기 중 30억원을 투자해 구도동 2359평 부지에 연건평 779평의 건축물과 첨단디지털 자동제어시



시스템 등을 갖춘 제반 시설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착공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가동될 경우 1일 음식물쓰레기 10톤정도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부가 산출되는 바이오사료 4.5t, 유기질 퇴비 5.7t이 생산되며 느타리버섯은 1.8톤정도가 생산될 전망이다.

조명식 부구청장은 "2005년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는 적매립이 금지될 전망"이라며 "이번 도입한 처리제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뉴시스]

1회용품 규제법 있었다

행정당국이 대형할인매장에서 제품 판매시 합성수지 도식락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일회용품 규제법을 대폭 강화했지만 시행 4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경남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1회용품 소비규제 강화 및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지난해 말 개정,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강화된 법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의 점포와 일정면적 이상 식당(150㎡)에서 떡, 만두, 반찬류 등을 합성수지 제품 용기에 담아 시판하지 못하도록 했고 약국 서점에서 도무상으로 1회용 봉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식당은 비닐테이블보를 깔지 못하고 경기시 막대풍선 등 응원용품을 무상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적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강화했다.

행정당국은 이 법의 시행전에 6개월여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별로 개선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진주시내 일부 매장에서는 떡과 김밥 식빵 등의 식품류가 합성수지 용기에 담겨 팔리고 있으며 재래시장에서도 떡과 돼지족발을 합성수지 도시락에 담아 팔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식당과 로스구이 식당은 1회용 나무이쑤시개 제품을 버젓이 테이블 위에 놓아두기도 하며 일부 서점과 약국에서는 무료 비닐봉투에 책과 약을 넣어주고 있다.

이처럼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홍보부족에다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편리성을 이유로 1회용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들 점포와 식당의 주인은 "규제가 강화됐다는 예기는 들었지만 손님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거나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하고 있어 당국의 홍보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은 "당국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1회용품 규제법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남일보]

재활용쓰레기 분류 아직 멀었다

전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70% 이상이 재활용 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고 있다.

전주YWCA가 전주시사업장 및 전주지역 빌딩과 상가 10곳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린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서 재활용 가능한 성상별로 분류, 조사한 결과 재활용 쓰레기가 7.7%를 차지했다.

이는 배출된 쓰레기를 청소소원이 청소차량에 수거하기도 전에 중간 수집상이 수거해 가는 데다 시민들의 재활용 가능 품목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전주YWCA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주지역 빌딩과 상가 65곳에 근무 또는 상주하는 시민들과 쓰레기 수거종사자 33명을 대상으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시민들이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조미영 전주YWCA 부장은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재활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구체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전북일보]